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갈등과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 잠재집단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정호** · 조민호***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고부담 잔여적 복지(29.5%), 제도적 복지(26.9%), 잔여적 복지(27.6%), 저부담 제도적 복지(16%)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의 결정요인들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기관신뢰와 개인신뢰, 민주주의, 사회갈등에 관한 인식)이 개인적 요인(주관적 계층의식)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신뢰와 개인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이기적인 저부담 제도적 복지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기관신뢰와 개인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청년세대, 복지의식 유형, 신뢰, 갈등, 잠재집단분석, 로지스틱 분석

I. 서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정책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복지정책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의식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지정책의 낮은 만족도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출산·교육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42).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yoojh@skku.edu)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chomh@skku.edu)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세대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보육 및 부모세대를 공양하는 세대이고, 우리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집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청년세대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넘은 오폭세대(인간관계, 내 집 마련의 포기)로 언급된다. 유아·청소년과 노인층은 각각 사회적 약자 세대로 분류되어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데 비해, 청년세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오히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국제적 비교에서 2013년 한국 청년세대의 고용률은 40.4%로 OECD 평균인 50.9%에 비해 약 10%p가 낮으며,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여 취업 재수를 택하는 청년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2013년도 OECD 통계치, 조선일보 2015.01.04). 둘째, 기성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졌던 반면,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같은 임금상승을 겪지 못 할 저성장이란 경제적 구조 속에 있고(주경필, 2015),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청년세대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근 5년여 간은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한 복지정책들이 집행되면서 복지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이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복지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세금부담 확대를 가져오며, 개인적 이익과 전(全) 사회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가령 사회적 빈곤해소, 결속력 및 유대감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반해, 무임승차 문제나 공유지의 비극 현상으로 인한 재정위기 초래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 간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현재 2016년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등(조선일보, 2015.11.11.)이 그 예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책임에 관한 의무를 국민들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 및 의식이 국가의 복지개혁 및 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achweh & Olafsdottir(2012)는 국민들이 사회 불평등과 계층화에 대한 국가 간·국가 내 사회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령, 미국과 독일, 스웨덴 각 국민들의 사회적 평등에 관한 열망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대중의 복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이 복지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며,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히 미래를 담당할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올바른 복지국가 개혁방향과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복지의식은 그가 성장한 역사적·문화적·경제적 경로의존성을 가진다. 서구 복지국

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 도출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복지의식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동시간대 살고 있는 한국인의 세대 간에도 각자 다른 역사적·경제적 경험을 하였으므로, 복지의식이 세대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유형화하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느끼는 다양한 갈등 양상들에 대한 인식이 복지의식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이론과 가정에 의한 대안 제시가 아닌 실제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복지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지의식

1) 개념

복지의식이란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사회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용이며, 복지태도란 복지의식에 기반한 행동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이중섭, 2009:76).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자면 전자가 복지에 대한 감정과 인상, 그리고 가치와 신념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그에 기반한 행동지향 또는 행위성향이란 의미를 갖는다.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식은 특정사회의 사회복지체제,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 일반 또는 궁극적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가치지향이나 태도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신영, 2010:90).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 복지의식이 가지는 특징은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집단적 의식이며, 둘째,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셋째, 사회구성 및 운영원리에 대한 전반적 가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성향, 사회 내 불평등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실천의지, 복지비용과 조세문제, 소득재분배 등 개념적으로 상이한 하위 구성영역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복지의식에 연구동향을 살펴본 변미희(2002)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의식 연구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 각 시기마다 한 편 이상 연구되었다. 한국인의 복지 의식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 중 최초로 이루어진 전국수준의 조사는 김영모(1980: 김상균·정원오, 1995 재인용)가 전국 가구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복지 의식은 자유방임형, 보완적 자유주의형, 제도적 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의 네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였는데, 80년대 한국인의 복지 의식은 중도우파 성향의 보완적 자유주의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김상균·정원오(1995)는 1994년도 전국민 1,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식 자료를 기초로 복지 의식을 분석하였다. 복지 의식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 이데올로기, 집합주의에 대한 경향 등을 묻는 여섯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양극단으로 나누어 더한 25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 4.496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90년대 한국인의 복지 의식은 사회가치 측면에서 평등을 강조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경향,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중도좌파의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현·홍경준(2010)은 서울시민의 복지태도를 잠재집단분석으로 분석하여, 복지확대 지지층, 부동층, 최저생활보장 지지층 등 세 가지 잠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민 중 복지확대 지지층의 비율은 66%를 차지하여, 잠재적인 복지확대 지지층이 매우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활용된 자료가 제1차 서울시 복지패널자료로, 2005년도에 조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훈희·김윤태(2012)는 Q방법론으로 한국 대학생의 복지태도를 보편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선별적 복지·증세 반대형, 혼합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과 인천의 대학생 21명을 질적연구하였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복지태도 결정요인도 계급, 사회적 지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상록·김형관(2013)은 생물학적 연령이 아닌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 기초한 의식 및 태도의 동질성 및 차별성을 기준으로' 세대를 정의하고, 산업화세대(1957년생 이전)와 민주화세대(1958년생-1971년생), 신세대(1972년생 이후) 등 세 세대로 구분하였다. 복지태도와 세대 간 차이를 ANOVA 분석한 결과, 신세대, 민주화세대, 산업화세대 순으로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5차년도(2010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최근 5년 동안의 한국복지를 둘러싼 무상급식 논쟁 등을 거치기 전의 태도를 조사한 자료로서 최근 한국인의 복지 의식을 설명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박미경·조민호(2016)는 성인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조사된 SSK '한국사회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잠재집단분석하여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다. 유형은 복지대상 선정과 복지책임주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의 응답에 따라 선별적 복합중심형(16%), 선별적 국가중심형(54%), 보편적 국가중심형(30%)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2010년대 들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선별적인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복지태도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자면,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8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0년대 무상복지 논쟁 이후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의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구분하여 복지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자료로 청년층에 주목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에 조사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세대가 갖는 복지의식의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한국 청년세대의 특수성: 비교복지이론과 세대효과의 적용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분석하는데 비교복지국가이론과 세대 효과를 적용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차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의 복지의식 형성은 각 국가에 따라 발달의 시기나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국가의 특수한 내부적·외부적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내어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비교복지국가 이론이다(박병현, 2005:14). 한국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세대 간의 복지의식을 도출하는데 비교복지국가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겠다.

세대별 복지의식에는 생애주기 단계 차이에 따른 연령 효과(aging effect)뿐만 아니라 세대의 역사적 경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효과(cohort effect)¹⁾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정치적·사회적 세대를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상록·김형관, 2013:9). 역사적 경험에 따른 세대 구분은 성장기(16~20세)의 역사적 경험이 개인 및 세대의 의식 및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년기 이후의 의식 및 행태를 주요하게 규정한다는 세대 이론을 근거로 한다(Manheim, 1952; Andreß &

1) Cohort effect는 성인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출생 코호트 별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세대 간의 체계적인 차이를 유발한다(Robin & Jackson, 2001). Cohort는 전쟁과 경제 불황 같은 역사적 경험에 따른 출생 코호트 간의 차이로 (N. Ryder, 1965; Robin & Jackson, 2001 재인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연령 효과(aging effect)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Heien, 1999 재인용).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분석하는데 비교복지국가이론과 세대 효과를 적용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차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문화영향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 배경을 살펴볼 때,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 태도, 관습 등은 인간 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박병현, 2005:39). 홍경준(1999:330)은 유교문화가 영향을 미친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유교주의 복지국가라고 설명한다.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유교의 효(孝)사상과 가족의 존주의의 영향을 받아,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제수준의 서유럽 국가들보다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등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요구가 낮았다. 그러나, 노인 부양을 책임져야 할 주체로 국가를 선택하는 20·30대의 비율이 40대 이상에 비해 높으며 봉양에 대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 경험이 있는 가족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경숙 외, 2012:45-47). 유교적 가치관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결정이론은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복지자본주의와 정치적 계층투쟁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노동계층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정비하였고,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계층을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포섭하는 계층동원을 통하여 정권을 잡은 후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다(Esping-Andersen, 1990). 그러나 한국의 맥락에서는 군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정권지지 세력인 군인, 교사, 공무원 집단에게 군인연금법(1963), 교원연금법(1973)과 공무원연금법(1982)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먼저 도입하였다(Kwon, 2003; 정무권, 2007:284).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정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계층투쟁보다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김경필, 2012:185). 즉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가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복지제도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주체로 국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수렴이론은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데올로기와 계층갈등, 문화가 아니라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의 사회제도는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해진다는 것이다(박병현, 2011:93). 하위 이론으로 산업화론과 경제성장, 사회적 충격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산업화론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박병현, 2005:35). 한국은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도시화, 핵가족화가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전통적 가족중심의 사회안정망은 해체되어 가족해체, 실업, 노인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공식적인 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사용가능한 자원이 증가한다면, 사회의 평등도 증대

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Wilensky(1975:27-28, 박병현, 2005:34 재인용)는 64개국을 비교하여,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 년도수가 국가 간 사회복지지출비의 차이를 약83% 설명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문화·정치적 요인이 다르더라도 경제성장 수준이 비슷하다면, 사회복지 수준도 비슷하다는 수렴이론을 지지한다. 한국 기성세대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겪은데 비해, 청년세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대에 성장하였기에, 복지욕구와 사회평등의식도 기성세대와는 다르다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충격 이론은 전쟁이나 공황 같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성세대에게 사회적 충격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절대빈곤이었다는 점에서 빈곤 탈피 및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정책에 주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50.5% 이상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IMF 외환위기를 꼽으며(박경숙 외, 2012:104), 아동·청소년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자본주의의 한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으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장하고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였다(권혁주, 2007; Kwon, 2001:103). 즉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배려대상을 인식하는 수준,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및 증세에 대한 의식이 기성세대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동시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세대 간에도 각자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였기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다른 복지의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복지의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 본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대한 가설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1: 복지대상 선정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보편적 복지 집단은 선별적 복지 집단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3. 복지의식과 그 영향 요인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1) 개인적 요인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의 이해관계, 가치관 및 정치적 성향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서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과 복지의식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균, 2002; 김신영, 2010; 이아름, 2011; 이한나·이미라, 2010). 연령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공식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신영, 2010).

둘째, 자기이해관계론은 한 사람의 사회구조 내 위치와 태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Gelissen, 2000). 높은 사회계층의 구성원은 기존의 사회규범에 대해 보수적이고 개인의 기여에 따른 보상체계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구성원은 평등주의적인 분배체계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Lewin-Epstein et al, 2003). 김신영(2010)은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의 공적복지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영순·여유진(2011)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복지 친화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은선·백정미(2007)는 소득지위 하위층이 중·상위층보다 뚜렷이 높은 평등지향성과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강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소득이 낮다면 국가에 의한 복지 확대를 선호한다는 추론이 가능해지고, 본 연구는 소득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2-1〉을 설정한다.

교육수준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소득이 높고 실업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김신영, 2010; 주은성·백정미, 2007), 이아름(2011)은 교육수준의 향상이 동시에 소득증가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의식발전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쇄효과가 발생하여 교육수준과 복지의식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계층변수의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백정미·주은선(2007)은 하위계층이 중위 및 상위계층에 비해 친복지적 경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김신영(2010)도 스스로 하위계층에 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위·상위계층에 비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확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계층으로 인식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가설 2-2〉를 설정한다.

셋째, 가치관 및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은 자기이해와는 독립적으로 그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그가 속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로부터 도출된다(김사현·홍준경, 2010).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Sachweh & Olafsdottir(2012)로, 국민들이 사회 불평등에 관한 인식과 그들이 선호하는 계층화 모형이 복지국가 유형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이다. 정치적 성향의 측면에서도 진보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Andress & Heien, 1999; 주은선·백정미, 2007 재인용),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할수록 복지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이아름, 2011).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면 공공복지 확대를 선호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2-3>을 설정한다.

복지수혜자에 대한 가치관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아름(2011)은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게으름)이 복지의식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급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복지정책과 복지지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Gilens, 2009; 이한나·이미라, 2010). 김사현·홍준경(2010)은 가치관이 복지의식에 중요 요인이라도 복지의식을 설명하지 못 하는 이유는 가치관과 정치성향은 객관적 요인들(사회적 지위나 제도)에 의해 복지의식으로 매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가설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1: 소득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2-2: 자신을 주관적으로 하위계층이라고 인식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2-3: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2) 사회적 요인

복지의식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사회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와 사회갈등, 민주주의, 소속집단 참여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 신뢰와 기관신뢰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기관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생산되는 유형의 신뢰로, 그 전제들로는 기관 또는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대다수 시민들의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를 복지의식에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사회갈등과 복지의식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외에 개인이 속해 있는 복지국가 유형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다.

세대별 사회적 신뢰에 관한 국내 연구로, 이재혁(2006)은 2004년 KGS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19-34세), 장년층(35-54세), 노년층(55세 이상)으로 구분²⁾하고 사회적 신뢰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이 가장 높는데 비해 제도적 신뢰는 청년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 외(2003)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2) 장년층은 38세대와 청년기에 유신정권을 경험한 세대이며, 이를 중심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신뢰를 비교하기 위한 세대구분을 하였다.

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세대 간 신뢰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 외에도 신뢰 수준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존재한다. 김신영(2010)은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공적복지책임 간의 상관관계를 다중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가 공적복지책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공적복지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독립변수인 사회적 신뢰를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를 묻는 5점 척도 한 개 문항만으로 측정하여 국가기관에 관한 제도적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Soroka et al.(2007)는 국민의 높은 정부신뢰가 복지프로그램 중 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높은 대인신뢰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요소임을 실증하였다. Bergh & Bjørnskov(2011)은 77개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높은 사회적 신뢰를 가진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지속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신뢰는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들을 억제하여 복지비용 증가, 지하경제 및 탈세를 막아 재정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Cheol-Sung Lee(2012)는 반대로 복지유형이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전 기반의 복지유형은 낮은 사회적 신뢰를 야기하는데 반하여, 훈련제공 기반의 복지유형은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umlin & Rothstein(2005)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선택적 복지국가 제도가 개인 간 신뢰를 감소시키고, 보편적 복지국가 제도는 개인 간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일선 정부기관이 공정하게 복지정책을 집행하여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한나·이미라(2010)는 형평성 지각을 사회적 신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소득분배 형평성 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 지각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등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장 및 선행연구 결과는 행정기관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복지의식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2>와 <가설 3-3>를 설정한다.

이성균(2002)은 사회 불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즉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증가를 통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4>를 설정한다.

이신용(2007)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시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간의 친화성이 있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의 확대를 선호한다. 그리고 오창현(2013)은 민주주의 수준과 복지향상 간의 정(+)적인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유지가 민주주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수준이 복지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및 선행연구 결과는 민주주의 발전정도에 따라 복지의식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고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의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1>을 설정한다.

박희봉 외 2인(2003)은 수평적(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청년회 등)뿐만 아니라 수직적(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사회단체 참여활동이 정부신뢰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수평적 사회단체 참여만이 정부 신뢰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은 수직적 사회단체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소속집단 참여가 정부신뢰 향상을 거쳐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속집단 참여에 소극적일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5>를 설정한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복지의식과 사회적 신뢰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신뢰는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갖는다. 복지의식과 신뢰의 관계는 일방적이기 보다는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 신뢰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제도가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세대의 사회적 신뢰를 개인 신뢰와 행정기관 신뢰로 구분하고, 두 종류의 각기 다른 사회 신뢰 및 갈등이 복지의식과 가지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가설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1: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고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3-2: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3-3: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3-4: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3-5: 소속집단의 참여가 소극적일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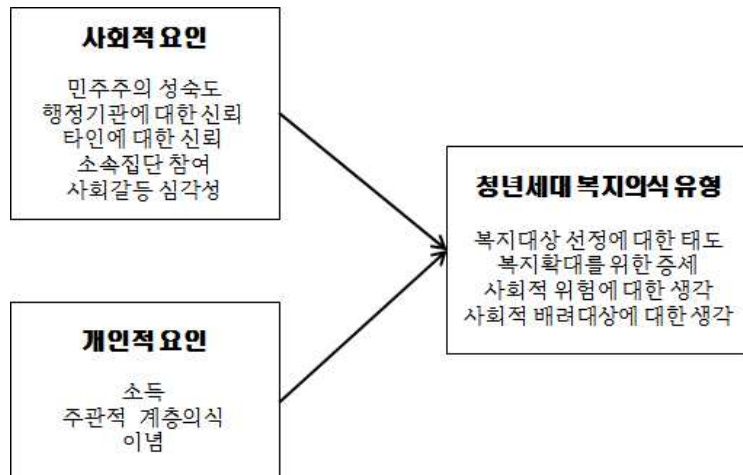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공존·협력 연구단의 'SSK 한국사

회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모집단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로, 표본은 2015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한 1,008명이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이다. 표본을 대상으로 종이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조사(PI)를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24일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만40세 이상의 응답자 643명을 연구 표본에서 제외하고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의 응답자 365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만19세에서 만39세까지의 표본 역시 비례할당이므로 대표성에 오차가 최소화될 것이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유형화하고, 개인적 요인(성별, 소득, 이념, 주관적 계층의식, 주거지)과 사회적 요인(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소속집단의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갈등에 관한 인식)이 복지의식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틀



본 연구의 분석은 〈그림 1〉에 나타난 듯이 우선 잠재집단분석으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유형화하고, 그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지의식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통계분석은 STATA 13.0과 LCA Stata Plugin(Version 1.2)으로 사용한다.

3. 변수설정

1) 종속변수: 잠재집단분석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조사항목을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IMF 외환위기 경험은 대다수의 청년세대에게 매우 강한 사회적 충격으로 인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위험(구직난, 자녀교육) 및 사회적 소외 대상(주변의 어려운 사람/영유아/고령자/장애인/빈곤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Mau & Mewes & Schoneck, 2012). 본 연구는 European Social Survey(2014, ESS Round 7 Source Questionnaire)의 Welfare Attitudes in Europe과 World Values Survey(2012)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2)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아래의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급속한 발전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종류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제도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과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의 복지의식을 규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의식을 유형화하는데 총 네 가지의 변수들을 활용한다.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대상 선정을 각각 보편적으로 혹은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세를 각각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다. 사회적 위험은 “나는 구직이 걱정된다”, “나는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등 두 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더미변수로 만들어 활용하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나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영유아/고령자/장애인/빈곤층을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등 다섯 가지 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잠재집단분석은 투입되는 변수의 범주 수가 많아지게 되면(특히 사례 수가 많을 경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잠재집단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 도출된 집단의 수가 많아질 경우 이론적 해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명의 간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김사현·홍경준, 2010:104),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더미화를 통하여 가능한 측정범주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표 1〉 잠재집단분석을 위한 지표

구분		내용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	보육복지	① 보편적 ② 선별적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소득세	① 증세 찬성 ② 증세 반대
	부가가치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각	구직이 걱정됨	① 긍정 ② 부정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까 걱정됨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생각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함	① 긍정 ② 부정
	영유아를 배려대상이라 생각함	
	고령자를 배려대상이라 생각함	
	장애인을 배려대상이라 생각함	
	빈곤층을 배려대상이라 생각함	

잠재집단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잠재집단분석은 추출되는 집단의 수를 자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집단 구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경우, 추출되는 군집의 수를 이론에 입각해 사전에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Top-down 방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에 대한 잠재적인 집단을 파악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집단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 귀납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Bottom-up 방식이며, 관찰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공통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하기에 탐색적 요인분석과 유사하다. 또한 관찰된 변인과 관찰되지 않은 변인의 확률적 관계를 파악하고 각 사례들이 잠재변인의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구한다(황순길 외, 2015:277). 따라서 잠재집단의 수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형의 적합도를 제공하고, 선택된 모형에 개인을 확률에 기초해 할당하는 잠재집단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잠재집단분석은 다른 형태의 군집분석과는 달리 선형이나 자료의 정규성, 분산의 동질성과 같은 통계학적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조지용·박태영, 2013:607). 즉 전통적인 변수 중심의 접근방식이 아닌 개인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응답자 중심의 유형화를 가능하게 한다. 관찰된 변수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패턴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복수의 잠재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강은나·이민홍, 2014:141).

2) 독립변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이성균, 2002; 주은성·백정미, 2007; 김사현, 2010; 김신영, 2010; 이아름, 2011; 이한나·이미라, 2010; 전주현, 2013:20; Robin & Jackson, 2001; Bergh & Bjørnskov, 2011).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별, 소득, 교육수준, 이념, 주관적 계층의식, 현재 거주지 등 여섯 가지 변수이다. 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한국 청년세대의 약7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중', '③ 대학 졸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이념은 '① 진보적', '② 중도', '③ 보수적'으로 구분하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① 상위계층', '② 중위계층', '③ 하위계층'으로 측정하였다. 현재 거주지는 도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민주주의,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타인에 대한 신뢰, 소속집단의 참여, 사회갈등 등 다섯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와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11점 척도 값을 더한 후, '① 미성숙', '② 보통', '③ 성숙' 등 세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 별로 사회적 신뢰 수준이 차이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는 기관신뢰로, 11점 척도 값을 사분위로 나누어 '① 매우 불공정', '② 불공정', '③ 공정', '④ 매우 공정'으로 측정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개인신뢰로,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도우려 하는가?'와 '사람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려고 하는가?'의 11점 척도 값을 더한 후 사분위로 나누어, '① 매우 이기적', '② 이기적', '③ 이타적', '④ 매우 이타적'으로 측정하였다. 소속집단의 참여는 11가지 소속집단들³⁾의 참여도에 대한 5점 척도 값들을 모두 합한 후 '① 소극적', '② 보통', '③ 적극적' 등 세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19가지 사람이나 집단 간 갈등⁴⁾의 5점 척도 값들을 모두 더한 후 '① 매우 심각', '② 심각', '③ 심각하지 않음', '④ 매우 심각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3) 소속집단의 종류는 종친회/향우회, 동창회, 취미/문화/학술모임, 계와 같은 상부상조 모임, 정당이나 정치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자선/봉사모임, 인터넷 동호회, 반사회, 종교모임 등이다.

4) 사회갈등의 종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군과 민간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경영자와 노동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남사람과 호남사람,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남성과 여성, 진보와 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등 19문항이다.

〈표 2〉 독립변수의 설정

구분	변수명	변수내용(준거집단)
개인적 요인	남성	더미변수(여성)
	소득	서열변수 (1. 1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교육수준	더미변수(고졸 이하) 2. 대학교 재학 중 3. 대학교 졸업 이상
	이념	더미변수(진보적) / 2. 중도적 / 3. 보수적
	주관적 계층의식	더미변수(상위계층) / 2. 중위계층 / 3. 하위계층
	거주지	더미변수(서울) / 2. 경기·인천 / 3. 대전·충청 / 4. 광주·전라 5. 대구·경북 / 6. 부산·울산·경남 / 7. 강원·제주
사회적 요인	민주주의	더미변수(미성숙) / 2. 보통 / 3. 성숙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더미변수(매우 불공정) / 2. 불공정 3. 공정 / 4. 매우 공정
	타인에 대한 신뢰	더미변수(매우 이기적) / 2. 이기적 3. 이타적 / 4. 매우 이타적
	소속집단 참여	더미변수(소극적) / 2. 보통 / 3. 적극적
	사회갈등	더미변수(매우 심각) / 2. 심각 3. 심각하지 않음 / 4. 매우 심각하지 않음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1.5% (188명)로 여성(48.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35-39세가 전체 응답자의 28.22%(103명)로 가장 많고, 24-29세가 25.21%(92명), 30-34세와 19-23세가 23.3%(85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최종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1.64%(152명)로 가장 많고, 대학교 재학 중이 29.04%(106명), 고등학교 졸업이 25.74%(94명), 대학원 이상이 1.92%(7명), 중학교 졸업 이하가 0.54%(2명)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중과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을 합하면 72.6%로 2010년 대학진학률이 79%까지 급증했다가 2014년 70.7%(통계청, 2014)로 하락한 수치를 고려하면, 표본이 청년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분포에서는 601만원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23.2%(6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1만원~500만원이 18.8%(51명), 201만원~300만원이 15.5%(42명), 301만원~400만원이 15.1%(41명), 501만원~600만원이 12.2%(35명), 101만원~200만원이 9.2%(25명), 100만원 이하가 6.3%(17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사무/관리/전문이 28.77%(10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이 18.08%(66명), 판매/서비스직이 17.81%(65명), 자영업이 13.42%(49명), 주부가 10.68%(39명), 무직이 7.4%(27명), 생산/기능/노무가 3.84%(14명)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응답자의 이념성향별 분포에서는 중도성향이 전체 응답자의 47.4%(17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성향이 35.34%(129명), 보수성향이 17.26%(63명)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특성

변수		빈도	비율(%)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88	51.50	가구 소득 (만원)	100만원 이하	17	6.30	
	여성	177	48.50		101-200	25	9.20	
지역	도시	313	85.75		201-300	42	15.50	
	농어촌	52	14.25		301-400	41	15.10	
연령	19-23	85	23.30		401-500	51	18.80	
	24-29	92	25.21		501-600	35	12.20	
	30-34	85	23.30		601만원 이상	63	23.20	
	35-39	103	28.22		직업	자영업	49	13.42
이념	진보적	129	35.34			판매/서비스	65	17.81
	중도적	173	47.40			생산/기능/노무	14	3.84
	보수적	63	17.26	사무/관리/전문		105	28.7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	0.54	주부		39	10.68	
	고등학교	94	25.75	학생		66	18.08	
	대학교 재학 중	106	29.04	무직		27	7.40	
	대학교	152	41.64	합계	365	100.0		
	대학원 이상	7	1.92					

2. 잠재집단분석: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

잠재집단분석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도비 카이제곱(Likelihood ration Chi-square),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djusted. BIC와 엔트로피 등 다섯 가지 지수로 모형의 적합도를 보고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적합도 지수들로 모형을 선택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우도비 카이제곱과 BIC, AIC는 낮을수록, 엔트로피는 1에 가까울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김사현·홍준경, 2010; 강은나·이민홍, 2014). 또한 이러한 통계적 지수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집단의 크기와 모형의 해석, 이론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여야 한다(Lanza et al., 2007).

〈표 4〉 잠재집단모형의 적합지수

잠재집단	Log-likelihood	df	AIC	BIC	Adj. BIC	Entropy
2	-1566.94	112	275.7232	334.2216	286.6328	0.76073
3	-1523.55	104	204.9386	294.6362	221.6667	0.75378
4	-1494.01	96	161.8615	282.7583	184.4080	0.76965
5	-1485.01	88	159.8492	311.9452	188.2142	0.77638

〈표 4〉에서 보듯이 두 개의 잠재집단에서 네 개의 잠재집단으로 옮겨갈수록 모형 적합도가 향상되는 추세이다. 다섯 개의 잠재집단은 네 개의 잠재집단에 비해 AIC는 낮아지고 엔트로피는 1에 약간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적합도가 향상되어 보인다. 그러나 신뢰받는 적합도 지수인 BIC와 adj. BIC가 가장 낮으며 이론적인 해석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네 개의 잠재집단으로 최종선택하였다.

〈표 5〉 네 개 잠재집단의 조건부 응답확률

구분			잠재집단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저부담 제도적 복지	고부담 잔여적 복지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	보육복지	보편	0.699444	0.056035	0.799939	0.066369
		선별	0.300556	0.943965	0.200061	0.933631
	노인복지	보편	0.782821	0.065147	0.839335	0.051435
		선별	0.217179	0.934853	0.160665	0.948565
	장애인 복지	보편	0.880025	0.336625	0.975982	0.261377
		선별	0.119975	0.663375	0.024018	0.738623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소득세	찬성	0.922039	0.123425	0.202312	0.988132
		반대	0.077961	0.876575	0.797688	0.011868
	부가가치세	찬성	0.987977	0.291948	0.114986	0.888955
		반대	0.012023	0.708052	0.885014	0.111045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생각		긍정	0.535439	0.590008	0.591379	0.739334
		부정	0.464561	0.409992	0.408621	0.260666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각		긍정	0.724971	0.474757	0.687113	0.698245
		부정	0.275029	0.525243	0.312887	0.301755
잠재 집단 비율			27.63%	26.85%	16.01%	29.49%

각 집단에 대한 해석은 각 설문의 범주에 응답할 조건부 확률에 기초해 이루어지며, <표 5>는 그 결과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첫 번째 집단의 경우는 상당히 친복지 성향을 보이면서 복지 확대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한국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위험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72.5%이며, 보육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70.0%, 노인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78.3%, 장애인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88.0%, 마지막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각각 92.2%와 98.8%로 친복지적 응답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제도적 복지 유형’으로 명명하며,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유형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집단은 앞의 유형과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52.5%이며, 보육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94.4%, 노인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93.5%, 장애인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66.3%, 마지막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세에 반대할 확률이 각각 87.7%와 70.8%로 반복지적 응답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집단은 Esping-Andersen이 분류한 유형 중 자유주의에 가까우며, 본 연구에서는 ‘잔여적 복지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사회적으로 위험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68.7%이며, 보육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80.0%, 노인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83.9%, 장애인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97.6%, 마지막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세에 반대할 확률이 각각 79.8%와 88.5%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집단은 사회적 위험을 인지하고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모순을 가진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으로 명명한다.

네 번째 집단은 사회적으로 위험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69.8%이며, 보육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93.4%, 노인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94.9%, 장애인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확률이 73.9%, 마지막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각각 98.8%와 88.9%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집단은 사회적 위험을 인지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찬성하지만, 복지는 선별적으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집단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으로 명명한다.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은 ‘제도적 복지 유형’, ‘잔여적 복지 유형’,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이

가장 큰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sping-Andersen의 분류에 따르면 ‘제도적 복지 유형’은 사민주의에 해당하고, ‘잔여적 복지 유형’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Esping-Andersen의 분류로 설명하지 못 하는 집단 중에서 우선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은 사회적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도 막상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은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찬성하면서도 복지대상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집단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잔여적 복지 유형과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 비율의 합은 56.34%로 한국 청년세대 중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집단이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청년세대의 비중이 44%가량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대상 선정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형은 제도적 복지 유형과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의 두 집단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고부담 잔여적 복지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집단은 선별적 복지 집단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높다는 <가설 1-2> 기각되었다. 셋째, 잔여적 복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유형 (제도적 복지 유형,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 모두에서 사회적 위험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 번째 가설인 사회적 위험을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3. 복지의식 유형의 구조

복지의식 유형의 구조를 선행연구에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표 6>은 복지의식의 분포를 개인적 요인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복지인식 별 개인적 요인 분포도

구분		잠재집단				전체	χ^2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저부담 제도적 복지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 비율		27.63%	26.85%	16.01%	29.49%		
성별	남자	52 (27.66)	42 (22.34)	30 (15.96)	64 (34.04)	178 (100.0)	1.685
	여자	51 (28.81)	48 (27.12)	23 (12.99)	55 (31.07)	177 (100.0)	
	합계	103 (100.0)	90 (100.0)	53 (100.0)	119 (100.0)	365 (100.0)	
교육 수준 ⁵⁾	고졸 이하	28 (29.79)	23 (24.47)	15 (15.96)	28 (29.79)	94 (100.0)	15.307
	대학 재학 중	27 (25.47)	26 (24.53)	11 (10.38)	42 (39.62)	106 (100.0)	
	대학 졸업	45 (29.61)	41 (26.97)	26 (17.11)	40 (26.32)	152 (100.0)	
	대학원 이상	3 (42.86)	0 (0.0)	0 (0.0)	4 (57.14)	7 (100.0)	
	합계	111 (100.0)	90 (100.0)	50 (100.0)	114 (100.0)	365 (100.0)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11 (20.75)	12 (22.64)	4 (7.55)	26 (49.06)	53 (100.0)	17.915*
	201~400만원 이하	36 (25.0)	40 (27.78)	23 (15.97)	45 (31.25)	144 (100.0)	
	401~500만원 이하	19 (28.79)	11 (16.67)	14 (21.21)	22 (33.33)	66 (100.0)	
	501만원 이상	30 (27.04)	33 (28.40)	8 (9.88)	20 (24.69)	91 (100.0)	
	합계	96 (100.0)	96 (100.0)	49 (100.0)	113 (100.0)	365 (100.0)	
주관적계층 의식	상위계층	3 (21.32)	6 (42.86)	1 (7.14)	4 (28.57)	14 (100.0)	9.423
	중산층	45 (32.85)	28 (20.44)	26 (18.98)	38 (27.74)	137 (100.0)	
	하위계층	52 (25.24)	56 (27.18)	26 (18.98)	72 (34.95)	206 (100.0)	
	합계	100 (100.0)	90 (100.0)	53 (100.0)	114 (100.0)	365 (100.0)	
이념	진보적	42 (32.56)	27 (20.93)	19 (14.73)	41 (31.78)	129 (100.0)	3.539
	중도적	43 (24.86)	45 (26.01)	27 (15.61)	58 (33.53)	173 (100.0)	
	보수적	18 (28.57)	18 (28.57)	7 (11.11)	20 (31.75)	63 (100.0)	
	합계	103 (100.0)	90 (100.0)	53 (100.0)	119 (100.0)	365 (100.0)	

*p<0.1

우선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보면,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성별과 복지의식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이성균, 2002; 김신영, 2010)와 동일하다. 교육수준도 네 가지 집단에 고르게 분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청년세대의 70% 이상이 대학교 재학 이상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에 따른 복지의식 잠재집단 분포를 카이스퀘어 검증으로 살펴보면,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는 고부담 잔여적 복지집단이 49.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구간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501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24.69%로 줄어든다. 반대로 제도적 복지는 200만원 이하 집단이 20.75%로 낮은 비율이었으나 소득구간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득세 증세 98.8% 응답확률로 찬성하면서, 복지 재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자신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가치관 및 정치성향에 초점을 두면, 주관적 계층의식과 이념은 복지의식 잠재집단에 고르게 분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다는 선행연구(Andress & Heien, 2001; 주은선·백정미, 2007 재인용)에 따라, 제도적 복지집단에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국 청년세대는 개개인의 복지의식을 형성하는데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한국 청년세대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한국인 전체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의식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김신영, 2010; 주은선·백정미,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복지의식 별 사회적 요인 분포도

변수		잠재집단				전체	χ^2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저부담 제도적 복지	고부담 잔여적 복지		
		27.63%	26.85%	16.01%	29.49%		
민주주의	미성숙	51 (49.51%)	45 (50%)	36 (67.92%)	67 (56.3%)	199 (100.0)	11.3585*
	보통	20 (19.42%)	12 (13.33%)	10 (18.87%)	15 (12.61%)	57 (100.0)	
	성숙	32 (31.07%)	33 (36.67%)	7 (13.21%)	37 (31.09%)	109 (100.0)	
	합계	103	90	53	119	365	

5) 각 셀당 5명 이하인 경우는 Fisher's Exact Test를 활용하였다.

		(100%)	(100%)	(100%)	(100%)	(100.0)	
일선 행정 기관의 민원 서비스	매우 불공정	3 (2.94%)	3 (3.45%)	8 (15.38%)	7 (5.93%)	21 (100.0)	22.2968***
	불공정	20 (19.61%)	14 (16.09)	4 (7.69%)	20 (16.95)	58 (100.0)	
	공정	37 (36.27%)	41 (47.13%)	30 (57.69%)	50 (42.37%)	158 (100.0)	
	매우 공정	42 (41.18%)	29 (33.33%)	10 (19.23%)	41 (34.75%)	122 (100.0)	
	합계	103 (100%)	90 (100%)	53 (100%)	119 (100%)	365 (100.0)	
타인에 대한 신뢰	매우 이기적	28 (27.18%)	26 (28.89%)	25 (47.17%)	25 (21.01%)	104 (100.0)	17.7715**
	이기적	41 (39.81%)	38 (42.22%)	16 (30.19%)	53 (44.54%)	148 (100.0)	
	이타적	17 (16.5%)	11 (12.22%)	10 (18.87%)	24 (20.17%)	62 (100.0)	
	매우 이타적	17 (16.5%)	15 (16.67%)	2 (3.77%)	17 (14.29%)	51 (100.0)	
	합계	103 (100%)	90 (100%)	53 (100%)	119 (100%)	365 (100.0)	
소속 집단 참여	소극적	30 (29.13%)	31 (34.44%)	17 (32.08%)	47 (39.5%)	125 (100.0)	11.6207**
	보통	35 (33.98%)	39 (43.33%)	17 (32.08%)	29 (24.37%)	120 (100.0)	
	적극적	38 (36.89%)	20 (22.22%)	19 (35.85%)	43 (36.13%)	120 (100.0)	
	합계	103 (100%)	90 (100%)	53 (100%)	119 (100%)	365 (100.0)	
사회 갈등	매우 심각	28 (27.18%)	19 (21.11%)	21 (39.62%)	28 (23.53%)	96 (100.0)	16.9225**
	심각	20 (19.42%)	34 (37.78%)	15 (28.3%)	35 (29.41%)	104 (100.0)	
	심각하지 않음	23 (22.33%)	18 (20%)	11 (20.75%)	27 (22.69%)	79 (100.0)	
	전혀 심각하지 않음	32 (31.07%)	19 (21.11%)	6 (11.32%)	29 (24.37%)	86 (100.0)	
	합계	103 (100%)	90 (100%)	53 (100%)	119 (100%)	365 (100.0)	

*p<0.1, **p<0.05, ***p<0.01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였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행정기관이 공정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도적 복지 집단은 행정기관의 활동이 매우 공정하다는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공정성에 따른 복지의식 집단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이기적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부담 제도적 복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집단은 타인을 이기적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그렇기에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에 따른 복지의식 집단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집단 참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제도적 복지와 저부담 제도적 복지집단은 소속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적 복지는 소속집단에 보통으로 참여하며, 고부담 잔여적 복지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집단 참여에 따른 복지의식 집단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나 집단 간 갈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갈등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잔여적 복지와 고부담 잔여적 복지 집단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나,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면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갈등에 따른 복지의식 집단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청년세대 복지의식의 네 가지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년세대 응답자의 26.85%가 속할 확률이 높은 잔여적 복지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과 제도적 복지,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결과 제시에 있어, 사용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1)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

〈표 8〉에서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의 결과를 보면, 개인적 요인에서는 주거지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소속집단 참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은 민주주의가 미성숙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성숙했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가 68.4% 낮았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정도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청년집단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매우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는 각각 79.8%, 91.7%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청년집단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으면 제도적 복지를 선호하는데 비해(김신영, 2010), 본 연구의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하는 청년집단은 기관신뢰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복지를 추구한다. 단, 이 집단은 제도적 복지의 선결과제인 복지재원 증세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매우 이타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과 이기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 매우 이기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는 각각 80.8%, 74.9%씩 낮게 나타났다.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청년집단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아우르는 개념인 사회적 신뢰가 낮은 청년집단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Bergh & Bjørnskov(2011)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야 보편적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였기에, 신뢰가 낮고 복지재원의 증세에 반대하는 집단에서 제도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임승차에 따라 복지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갈등에서, 사회갈등이 전혀 심각하지 않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하는 집단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가 각각 85.7%, 64.4%씩 낮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년집단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하므로, 사회적 불평등에 따라 갈등이 심해진다면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표 8〉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p(b)	S·E	p-value	
준거 집단 : 잔여적 복지 (26.85%)						
저부담 제도적 복지 (16.01%)	개인적 요인	이념 (진보적)	중도적	0.479	0.237	0.136
			보수적	0.389	0.260	0.158
		주관적 계층의식 (상위계층)	중위계층	7.847	10.156	0.111
			하위계층	2.594	3.347	0.460
	사회적 요인	민주주의 (미성숙)	보통	1.828	1.159	0.342
			성숙	0.316	0.187	0.051*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매우 불공정)	불공정	0.083	0.087	0.018**
			공정	0.369	0.322	0.254
			매우 공정	0.202	0.194	0.095*
		타인에 대한 신뢰 (매우 이기적)	이기적	0.251	0.133	0.009**
			이타적	0.943	0.613	0.928
			매우 이타적	0.192	0.179	0.078*
		소속집단 참여 (소극적)	보통	0.982	0.521	0.973
			적극적	2.279	1.254	0.134
	사회갈등 (매우 심각)	심각	0.356	0.201	0.068*	
		심각하지 않음	0.416	0.265	0.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0.143	0.100	0.005**	
	모형적합도 (N: 365)		Log likelihood	-388.37322	Prob > chi2	0.0000***
LR chi2(12)			169.03	Pseudo R2	0.1787	

*p<0.1, **p<0.05, ***p<0.01

2) 제도적 복지 유형

〈표 9〉에서 제도적 복지 유형의 결과를 보면, 개인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자신이 주관적으로 상위계층에 비해 중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집단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가 547.8%가 높았고, 하위계층의 승산비는 366.3% 높았다. 스스로를 중위계층과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청년세대는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전체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김신영, 2010; 주은선·백정미, 2007)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사회갈등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덜 심각하다는 인식하는 청년집단은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가 59.9%가 낮다. 사회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청년집단이 제도

적 복지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구성원 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문제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다는 이성균(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9〉 제도적 복지 유형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p(b)	S·E	p-value
준거 집단 : 잔여적 복지 (26.85%)						
제도적 복지 (27.63%)	개인적 요인	이념 (진보적)	중도적	0.579	0.225	0.160
			보수적	0.728	0.352	0.509
		주관적 계층의식 (상위계층)	중위계층	6.478	5.833	0.038**
			하위계층	4.663	4.145	0.083*
	사회적 요인	민주주의 (미성숙)	보통	1.279	0.645	0.625
			성숙	0.525	0.217	0.121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매우 불공정)	불공정	2.025	1.961	0.466
			공정	1.494	1.381	0.664
			매우 공정	3.079	2.921	0.236
		타인에 대한 신뢰 (매우 이기적)	이기적	0.909	0.378	0.821
			이타적	1.547	0.858	0.431
			매우 이타적	1.221	0.692	0.724
		소속집단 참여 (소극적)	보통	0.835	0.335	0.654
			적극적	1.432	0.624	0.410
		사회갈등 (매우 심각)	심각	0.401	0.191	0.056*
			심각하지 않음	0.705	0.355	0.488
	전혀 심각하지 않음		0.856	0.427	0.757	

*p<0.1, **p<0.05, ***p<0.01

3)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

〈표 10〉에서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요인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소속집단의 참여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타인을 이타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 매우 이기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는 226.6% 높게 나타났다. 소속집단의 참여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보통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에 속할 승산비가 59.3% 낮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일반적으로 제도적(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김신영, 2010; Bergh & Bjørnskov,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이타적으로 인식

하여 신뢰가 높은 청년집단이 고부담 잔여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담 잔여적 복지는 가난한 대상에 복지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위한 복지재원 증세에 찬성하는 의식을 가진 유형이다. 따라서 한국 청년세대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 잔여적(선택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비용은 함께 분담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유형이다.

〈표 10〉 고부담 잔여적 복지유형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p(b)	S·E	p-value
준거 집단 : 잔여적 복지 (26.85%)						
고부담 잔여적 복지 (29.01%)	개인적 요인	이념 (진보적)	중도적	0.879	0.332	0.733
			보수적	0.678	0.329	0.423
		주관적 계층의식 (상위계층)	중위계층	3.386	2.822	0.143
			하위계층	3.283	2.676	0.145
	사회적 요인	민주주의 (미성숙)	보통	0.907	0.461	0.847
			성숙	0.674	0.267	0.318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매우 불공정)	불공정	0.412	0.359	0.308
			공정	0.489	0.398	0.380
			매우 공정	0.629	0.533	0.585
		타인에 대한 신뢰 (매우 이기적)	이기적	1.293	0.531	0.531
			이타적	3.266	1.725	0.025**
			매우 이타적	1.633	0.929	0.389
		소속집단 참여 (소극적)	보통	0.407	0.155	0.018**
			적극적	0.912	0.368	0.820
	사회갈등 (매우 심각)	심각	0.615	0.275	0.277	
		심각하지 않음	0.953	0.473	0.922	
		전혀 심각하지 않음	0.753	0.378	0.571	

*p<0.1, **p<0.05, ***p<0.01

4) 가설검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복지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중 주로 사회적 요인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인식만이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잔여적 복지 유형에 비해 제도적 복지, 저부담 제도적 복지,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 모두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소득은 청년세대 복지의식 유형화의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둘째, 주관적으로 상위계층에 비해 중·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집단은 잔여적 복지 유형에 비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셋째 이념은 잔여적 복지 유형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념은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보적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성숙도, 기관신뢰 및 개인신뢰, 사회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등, 소속집단 참여를 제외한 네 가지 요인이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민주주의가 성숙하였다고 인식할수록 잔여적 복지유형에 비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고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둘째,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잔여적 복지 유형에 비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2>은 채택되었다. 셋째, 타인을 이타적인 존재라고 인식할수록 잔여적 복지 유형에 비해 저부담 제도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넷째, 사회 갈등이 덜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잔여적 복지 유형보다 저부담 제도적 복지유형과 제도적 복지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4>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소속집단의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잔여적 복지유형보다 고부담 잔여적 복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속집단의 참여가 소극적일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3-5>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가설 검증 결과

구분	가설		
복지 의식 유형	가설 1-1	복지대상 선정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2	보편적 복지집단은 선별적 복지집단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1-3	사회적 위험을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기각
개인적 요인	가설 2-1	소득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기각
	가설 2-2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기각
사회적 요인	가설 3-1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고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가설 3-4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할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가설 3-5	소속집단의 참여가 소극적일수록 공적복지책임 축소를 선호할 것이다.	기각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한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 정책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최근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복지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사회를 보는 의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복지의식에서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세대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상황에서 보육과 부모 봉양을 맡고 있지만, 복지정책에서는 다른 세대보다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가 갖는 복지의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수혜대상 범위와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 찬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변수로 구성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에 대한 유형은 고부담 잔여적 복지형(29.49%), 제도적 복지형(27.63%), 잔여적 복지형(26.85%), 저부담 제도적 복지형(16.01%) 등 네 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청년세대의 약30%를 차지하는데, 사회적 위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유형인 고부담 잔여적 복지형으로 나타났다. 이 유

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청년집단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타인을 이타적 존재로 인식하는 청년집단은 빈곤층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 집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위험이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찬성하는 제도적 복지형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약 28%)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중위·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위험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가난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증세를 반대는 잔여적 복지형이 약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 복지의식 유형은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는 저부담 제도적 복지형이다. 사회적 위험이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반대하는 모순적인 집단이란 점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유형의 청년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고 타인을 매우 이기적 존재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사회적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년세대의 과반 이상(56.4%)은 복지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나머지 43.6%는 보편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미경·조민효(2016)은 한국인 전세대를 대상으로 잠재집단 분석 결과, 선별적 복합중심형(16%), 선별적 국가중심형(54%), 보편적 국가중심형(30%)로 구성되었다. 즉 한국인의 70%가 선택적 복지의식을 선호하고 나머지 30%가 보편적 복지의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세대의 43.64%가 보편적 복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성인이 된 후 복지국가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경험하며, 보편적 복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도 절반 이상(57%)이 찬성하는데 비해 43%는 반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및 증세 찬반 등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의식을 가진 청년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문제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신뢰 향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잠재집단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년세대의 16.01%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증세에는 반

대하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이러한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 즉 낮은 기관신뢰 및 개인신뢰, 사회갈등의 심각성, 미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이다. 김신영(2010)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높아진다고 보았으며, Bergh & Bjørnskov(2011)은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억제하여 보편적 복지가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신뢰와 기관신뢰는 OECD 회원국에 비해 하위권이며, 특히 기관 신뢰는 OECD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여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OECD, 현대경제연구원, 2012). 따라서 무임승차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향상 및 민주주의 성숙이 필요하다. Dekker & Uslaner(2001)는 시민문화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문화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성숙이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봉사활동 및 기부를 포함한 이타적인 사회참여가 기관신뢰와 개인신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박병진, 2007:97), 봉사활동 참여를 이끄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신뢰의 향상을 위하여 거시적 차원으로는 행정부 개혁이 요구되나, 미시적 차원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부터 공정한 업무 및 책임있는 복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세대 간 복지의식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론(公論) 공간의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의식의 세대갈등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인식할 때 형성되기 쉽다(박경숙 외, 2012:61). 특히나 오늘날 청년세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한국 사회에서(KDI, 2015),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원활하지 않는 이 중고를 겪고 있어, 세대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최근 KBS 광복 70년 국민 의식조사(2015)에서 나타나듯이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복지수요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 완화(20대의 68.1%, 30대의 40.3%), 육아보육부담 경감(30대의 42.8%), 주거불안 해소(30대의 32.7%)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고용보장(40대의 47.9%), 노후 연금 확대(50대의 32.5%), 재취업 기회 확대(50대의 31%)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청년세대들은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증세에도 과반수이상 찬성을 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비중이 약 44%로 선택적 복지보다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기성세대(1971년생 이상 세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이상록·김형관, 2013:448). 이렇듯, 앞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세대들이 가진 복지의식 및 특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증가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세대 간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할 수 있도록 공론 공간의 형성(이상록·김형관, 2013:452) 및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인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들 중에는 연구대상과 그의 가족 중에 어떤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복지인식이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그 가족의 복지별 수혜 여부를 살펴보지 못 하였다. 또한 사회적 요인 중 제도적 신뢰를 행정부, 정치, 언론 등으로 더 세분화하고, 갈등 역시 계층간 갈등, 세대간 갈등, 정치이념간 갈등, 지역간 갈등, 정부간 갈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 및 환경, 제도가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인과관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경험한 복지국가 유형 및 제도의 차이가 각 세대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대별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는 연령효과(aging effect)와 세대효과(cohort effect), 시대효과(period effect)의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으나(이상록·김형관, 2013:441), 본 연구는 세대효과에 따른 청년세대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차후 지속된다면, 사회적 신뢰 및 갈등과 복지인식 간의 상호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은나·이민홍. (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인요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2호, pp.133-160.
- 권혁주. (2007).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 -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3호, pp.67-90.
- 김경필. (2012). 오페의 복지국가이론과 복지국가 성격 논쟁. 「경제와 사회」, 통권 제93호, pp.164-192.
- 김민주·지은구. (2015).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자본이 사회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김사현·홍준경.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2호, pp.95-121.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5호, 1-33.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87-106.
- 김연명.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6권, pp.27-59.
- 김영모. (1980). 「한국인의 복지인식」. 일조각:서울.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1호.
- 김원섭. (2011). 한국 복지국가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세아연구」, 제54권 제4호. pp.186-215.
- 박경숙·서이중·장세훈. (2012). 세대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2-08.
- 박길환·조덕호. (20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타적 시민복지 인식의 중요성.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1호. pp.29-51.
- 박미경·조민효. (2016).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pp.65-105.
- 박병현. (2005). 「복지국가의 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 _____. (2011).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서. 파주.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pp.45-66.
- 변미희. (2002).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2호. pp.75-89.
- 오창현. (2013).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pp.75-94.
- 이상록·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pp.433-458.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pp.205-228.
- 이신용. (2007).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결합 있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pp.137-162.
- 이아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제40권 제5호. pp.61-98.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73-99.
-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254-286.
- 이훈희·김윤태. (2012). 한국 대학생의 복지태도: Q방법론을 통해 본 세 가지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2호. pp.23-49.
- 전주현. (2013).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계급, 자기이해, 이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경희.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pp.5-10.
- 정무권. (2007).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 인간과 복지.
- 조영훈. (2006).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복지국가 이론들의 비교와 평가」. 한울아카데미.
- 조선일보. (2015.01.04.). [리뷰링 코리아] 청년고용률, OECD 평균보다 10%p 낮아... '정규직 청년' 증가해야 성장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4/2015010401049.html)

- _____. (2015.11.11.). 4개월 무상보육(3~5세 대상) '2년째 핑퐁', 내년 누리과정 예산 2兆 부족, 박근혜 정부는 “지방 재정으로” 진보 교육감들 “國庫 부담으로”.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11&D=11&ID=2015111100129)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1호. pp.189-21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4/2015010401049.html)
-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pp.203-225.
- 한국종합사회조사.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http://kgss.skku.edu>)
- 황순길·손재환·전연진·양민정. (2015).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문제 계층별 상담 요구분석. 「청소년상담연구지」. 제23권 제1호. pp.273-293.
- 현대경제연구원. (2014.05.23.).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홍경준. (1999).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비교분석: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pp.309-335.
- KBS. (2015). 광복 70년 국민의식조사.(http://news.kbs.co.kr/datafile/2015/08/0814_re.pdf)
- Andreß & Heien. (1999). Explaining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German welfare stat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onference on Recent Trends and Methods of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 Clark, April & Eisenstein, Marie. (2013). Interpersonal trust: An age-period-cohort analysis revisited.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 pp.361-375
- Aspalter, C. (2006).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5 pp. 90-101.
- Andreas Bergh & Christian Bjørnskov. (2011). Historical Trust Levels Predict the Current Size of the Welfare State. *KYKLOS*, Vol. 64, pp.1-19.
- Dekker & Uslaner. (2001).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Esping-Andersen.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 European Social Survey. (2014.05). Round7 Source Questionnaire.
-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s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ume. Vol. 9, Issue.4, pp.285-300.
- Kumlin, S. & Rothstein, B. (2005). MAKING AND BREAKING SOCIAL CAPITAL: The Impact of Welfare-State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8, No. 4, pp.339-365.
- Kwon, Soonman. (2003). Healthcare financing reform and the new single payer system in Korea: Social solidarity or efficienc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6, No. 1. pp.75-94.
- _____. (2001). Economic crisis and social policy reform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0, No. 2, pp.97-106.

- Choel-Sung Lee. (2012). Welfare States and Social Trus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6, No. 5, pp.603-630.
- Mau & Mewes & Schoneck. (2012). What determines subjective socio-economic insecurity? Context and clas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o-Economic Review*. Vol. 10, Issue. 4. pp.655-682.
- Lewin-Epstein & Kaplan & Levanon. (2003).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Justice Research*. Vol. 16, Issue. 1, pp 1-27.
- Sachweh, P. & Olafsdottir, S. (2012).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atification Realities and Aspirations in Three Welfare Regi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8, No.2, pp.149-168.
-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New York.
- Robin, Robert & Jackson, Elton. (2001). Is trust in other declining in America? An age-period-cohort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0, pp.117-145.
- Soroka, S & Banting, K & Johnston, R. (2007). Ethnicity, Trust, and the Welfare State. In *Social Capital, Diversity, and the Welfare State*, ed. Fiona Kay and Richard Johnston. Vancouver: UBC Press.
- World Values Survey. (2012). 2010-2012 Wave, revised master.

A Study on Trust, Conflict and Types of Welfare Consciousness among Korean 20s and 30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Yoo, Jeong Ho & Cho, Rosa Minhy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young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types and further analyze the factors which impact each type of welfare consciousness. Results from the latent class analysis indicate four distinct welfare consciousness types: residual welfare with high funding levels cluster(29.5%), residual welfare cluster(26.9%), institutional welfare cluster(27.6%), and institutional welfare with low funding levels cluster(16%). Result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indicate that social factors(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awareness about social conflict and democracy) have a stronger impact on welfare consciousness than individual factors(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levels of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one belonging to the institutional welfare with low funding levels cluster. Additional effort at the social level shall be required to improve both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in order to develop a sustainable welfare state.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young generation, welfare consciousness, trust, conflict, latent clas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